

“정체된 산업에 활력을… 국민성장펀드 규모 150兆로 확대”

국민성장펀드 보고대회·토론회

李 대통령 “지원방식 대대적 개편
벤처·혁신기업 육성… 생태계 활성화
모험·혁신투자 환경 조성 약속”

이재명 대통령이 인공지능(AI) 등 첨단분야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하는 국민성장펀드에 대해 “정체된 우리 산업에 새롭게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며 펀드 규모 확대, 벤처·혁신기업 육성 등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10일 서울 마포 프론트원에서 열린 ‘국민성장펀드 국민보고대회 및 토론회’에 참석해 산업계, 창업·벤처업계, 금융권 관계자들을 만났다.

이번 국민보고대회는 인공지능(AI), 로봇, 바이오, 반도체, 방산, 항공·우주 등 대한민국의 주력 첨단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소위 ‘물수능’ ‘불수능’이라고 해서 능력이 엄청나게 어려우면 걱정이 많이 되는데, 사실 나한테만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걱정할 게 아니다”라며 “평소에 누가 얼마나 준비하고 공부했느냐에 따라 결문이 나는 거다. 경쟁의 조건은 언제나 똑같다”고 짚었다.

이어 “지금엔 전 세계적으로 통상·경제 환경이 매우 어렵다”며 “우리가 가진 모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열린 국민성장펀드 보고대회에서 참석자 발언을 듣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든 역량을 총동원하고, 가진 힘을 함께 모으는 국민적 통합이 정말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무역장벽 강화와 통상 환경 불확실성 같은 이런 어려운 시기에, 미국·중국 등 주요국들이 첨단 전략산업에 대한 국가적 투자 지원을 확대하면서 그야말로 ‘총성 없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대한민국은 몇 년간 지속됐던 저성장을 계속할 것이냐, 주력 산업의 경쟁력 약화 등으로 매우 어려운 지경이 됐는데 계속 이 상태를 방치할 것이냐, 아니면 새롭게 선진국으로 도약할

것이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분기점에 서 있다”며 “(국민성장펀드는) 국민과 정부와 경제계가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드는 초석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전에 100조원 규모 펀드를 얘기했는데, 좀 더 과감하게 펀드 규모를 150조원으로 50% 더 늘려서 확대하기로 했다”며 “지원 방식도 대대적으로 개편해서 우리 경제를 선도할 핵심 산업, 그리고 프로젝트에 대규모로 투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벤처·혁신기업 육성을 통해 벤처 생태계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벤처기업의 성장, 혁신적인 기술이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동력”이라며 “그동안에는 대기업 성장 그리고 선진국 추격에 국가 자원을 집중 투입하고, 벤처·혁신기업 육성에 다소 부족한 면이 있었던 게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잘 되는 기업은 더 잘 되게 하고, 실패해도 재기할 수 있도록 벤처 생태계를 활성화해야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가 있을 것 같다”면서 “다만 모험성, 인내성은 시장에서 혼자 살아남기 어렵다는 점을 저허가 잘 알기 때문에, 예를 들면 후순위 투자를 한다든지 이런 마중물 역할을 통해서 민간 자금을 이끌어내도록 하

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이끌 첨단 산업 육성, 벤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서는 금융 분야가 지금처럼 담보 잡고 돈 빌려 주고 이자받는 전당포식 영업이 아니라 생산적 금융으로 대대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면서 “순수한 이자 수입에 의존하거나 부동산 투자에 자금이 쏠리지 않도록 모험 투자, 혁신 투자에도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벤처 생태계 자금 지원, 또 초장기 대규모 인프라 지원 등에 자원이 사용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바꾸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국민보고대회는 본격적인 토론회에 앞서 금융위원회가 ‘국민성장펀드 조성 및 운용전략’을 발표하고, 이후 첨단 전략산업 육성 전략, 창업·벤처생태계 활성화 등과 관련한 토론회가 실시됐다.

자유토론은 ‘국민성장펀드 지원대상’ ‘벤처생태계 활성화’ 등을 주제로 진행됐고, 누구나 토론 현장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도록 KTV로 생중계됐다.

대통령실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수렴한 의견을 반영해 ‘150조원 국민성장펀드’를 속도감 있게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우리나라 첨단 전략산업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설명했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송언석 “反기업 악법으로 경제 죽어가 국민의힘, 후속 보완입법 착수할 것”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노란봉투법·더 센 상법 부작용 지적
상속세·법인세 낮춰 세금부담 덜어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사진) 10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더 센 상법(상법 2차 개정안)’ 등 부작용을 보완할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서 “반기업 악법으로 경제가 죽어간다”며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경제정책을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정부 주장대로 국가 재정이 경제회복의 마중물이 되려면, 씨앗을 빌려 지은 농사가 풍년이 들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라며 “민간의 혁신과 투자가 있어야 한다. 경제성장을 이끌어가는 것도, 씨앗을 풍성한 곡식으로 키워내는 것도 기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런데, 지금 정부여당은 온갖 반(反)기업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마중물을 받아들일 지하수를 오페수로 만들고 있다. 씨앗이 자라날 논밭을 황무지로 만들고 있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반대와 국내외 경제계의 절박한 호소를 끝내 외면하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더 센 상법’(상법 2차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노란봉투법은 불법쟁의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가로막고,



수백, 수천 개의 하청기업 노조가 원청 기업을 상대로 직접 교섭하도록 했다. 해외투자 같은 경영상 판단까지 쟁의 대상에 포함시켰다”며 “선진국 수준에 맞춘다는 정부 설명은 사실 왜곡이다. 이처럼 일방적으로 노조 편에 서서 산업현장에 불법과파업을 용인하는 선진국은 단 하나도 없다”고 덧붙였다.

송 원내대표는 “법을 시행도 하기 전에 벌써부터 폐해가 나타나고 있다. 민주노총 산하 현대제철 협력사 노조, 네이버 7개 자회사, 발전소 노조가 원청 기업을 상대로 집단행동을 시작했다”며 “HD현대중공업과 HD현대미포의 노조는 미국 조선 시장 진출에 반발해 파업을 시작했다. 정부가 자랑하던 마스가(MASGA) 프로젝트가 시작도 전에 노란봉투법에 발목이 잡혔다. 법이 본격 시행되면 산업현장의 대혼란은 불을 보듯 뻔한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상장사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를 담은 2차 상법 개정안을 ‘더 센 상법’이라고 부르며 “기업 경영권을 상시적으로 위협하는 경영 마비법”이라며 “국내 투자자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 투기자본의 탐욕만 채워주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여기에 더해 정부여당은 자사주 소각을 강제하는 3차 상법 개정안까지 추

진하겠다고 한다. 가뜰이나 기업 방어장치가 없는 우리 기업은 외국계 자본, 적대적 M&A에 무방비로 노출될 것”이라며 “노란봉투법, 더 센 상법은 결국 한국에서 사업을 하지 말라는 ‘기업 단두대법’”이라고 부연했다.

송 원내대표 “국민의힘은 기업과 국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후속 보완입법에 착수하겠다. 그 방향은 책임과 자율, 노와 사의 균형”이라며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편의, 쟁의 개념과 범위를 더욱 명확하게 해야 한다. 다른 선진국처럼 노조의 주요 사업장 점거를 금지하고, 파업 기간 중 대체근로를 허용하여 기업 방어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상법 개정안은 ‘경영 판단 원칙’을 명문화하고, 기업 활동을 극도로 위축시키고 있는 배임죄도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면서 “주요 선진국처럼 신주인수선택권(포이즌필), 차등의결권을 도입해 경영권 방어를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글로벌 추세에 발맞춰 상속세와 법인세는 더욱 낮춰서 중산층과 기업의 과도한 세금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면서 “우리당은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완화하는 법안을 이미 발의했다. 국정에 무한 책임이 있는 민주당이 국가경제를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후속 보완 조치 마련에 적극 호응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



10일 국회에서 열린 제44차 지구촌보건복지포럼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왼쪽 네번째), 전혜숙 전 의원(왼쪽 다섯번째), 조국제 유한양행 사장(왼쪽 여섯번째), 이장규 메트로미디어 대표(왼쪽 세번째)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지방서도 필수의료 서비스 누리도록 하겠다”

제44차 지구촌보건복지포럼
새정부 보건의로 비전 제시

정부가 향후 5년 내 모든 국민이 사는 지역에서 필수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공공의료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2차관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제44차 지구촌보건복지포럼에서 ‘새 정부의 보건의로 정책’을 주제로 한 강연을 갖고, ▲지속가능한 보건의로 체계로 전환 ▲지역격차 해소, 필수의료 확충, 공공의료 강화 ▲일차의료 기반의 건강·돌봄으로 국민 건강증진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의료AI·제약·바이오 헬스 강국 실현 등의 새정부 보건의로 비전을 제시했다.

강연에 따르면 한국의 기대수명과 회피가능 사망률 등은 OECD 평균보다 우수하지만, 인구 10만명 당 자살사망률은 지난해 28.3%로 OECD 평균(10.7%)의 두배가 넘는다. 또한 의료자원이 대부분 대도시와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지역별·소득수준별 건강수명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더 이상 한국은 마약 청정국가가 아니며 기후 변화로 인한 폭염과 감염병 확산 등의 위기에 직면

해 있다.

새 정부는 이런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5년 내 공공의료 강화 기반 지역연결 필수의료체계 구축을 목표로 내세웠다. 국민·의료계가 모두 지지할 수 있는 의료개혁 로드맵을 마련하고, 의료 보상체계를 개편할 예정이다. 지역 국립대병원을 권역 거점병원으로 육성해 의료의 지역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의사 전형과 공공의료사관학교 등을 도입해 공공의료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 사는 곳을 중심으로 일차의료체계를 구축, 지역사회 주치의 모델을 도입할 예정이다.

이 차관은 “지방에서도 서울에 올라오지 않고 사는 곳에서 필수 의료 서비스를 모두 누릴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날 지구촌보건복지포럼 대표의원인 전혜숙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현 경기도일자리재단 이사장)을 비롯, 이경률 지구촌보건복지포럼 이사장,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 조국제 유한양행 사장, 한미약품 박재현 사장 등도 참석했다. 특히 이날 포럼에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세경 기자 seilee@